

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반덤핑 제도 강화

(해당 실: 세제실, 과: 반덤핑관세팀, 담당자: 김성우, 전화번호: 044-215-4461)

I. 추진 배경

- 전세계적 공급과잉 및 미·중 패권경쟁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질서 및 여건 변화 ⇒ 불공정 무역대응 역량 강화 필요
 - (무역구제 수요증대) 덤핑수입, 수출제한 등 불공정 무역 확산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계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증가
 - * 덤핑방지관세 부과(건): ('21) 4 ('22) 4 ('23) 5 ('24) 6 (**'25.10월) 12**(조사중 6건)
 - 최근 무역촉도 조사인력 등 조직 확대('25.3월, 4과 43명→6과 59명)

II. 정책 내용

- 덤핑방지관세제도 기획 및 운용을 전담하는 반덤핑관세팀 신설
 - * 반덤핑관세팀 인원 구성 : 총 4명(팀장 1, 사무관 2, 주무관 1)
 - (역할 강화) 무역위와 협력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,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및 사후점검 등의 업무 수행
 - 경제적 파급력이 큰 품목의 경우 무역위가 건의한 덤핑방지세율 수준에 대하여 자체 분석·평가할 수 있는 도구 마련 추진
 - 우회덤핑방지관세 과세범위 확대
 -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,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·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
- ⇒ 급증하는 불공정 무역에 대응한 반덤핑 제도 기획·운영의 고도화

Ⅲ. 성과 및 기대효과

□ 철강 제품 및 산업용 로봇 등 국가 기간 산업 보호에 선도적 역할

- (철강) 주력 제품인 후판 및 열연강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로
주요 업체의 실적 개선 뚜렷('24년 4분기 적자 → '25년 3분기 흑자 전환)

* 매일경제('25.10.30.) : "○○제철, 실적 저점 지나 4분기 반등 예고"

이데일리('25.10.21.) : "반덤핑 덕에 숨통 트는 철강업계, 관세충격 딛고 실적 방어"

- (로봇)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中·日 업체들의 제고
소진 및 시장 선점 등을 위한 불공정 무역 시정

* 한국경제('25.11.8.) : "中·日 산업용 로봇 덤핑에 관세 당연"

□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, 특히 중소수입업체 피해 및 수출국과의 통상협력 관계 악화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* 시행

* 가격약속 협상 과정에서 국내 생산업체와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소수입업체
및 수출업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→ 이해관계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

** 가격약속(Price Undertaking) : 공급자가 공급가격 인상 및 물량조정을 약속함
으로써,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시키는 제도(관세법 §54)

- 팀 신설 이후 이해관계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
경제적 효과 검토 및 가격약속 협상을 적극적으로 운영*

* 중국산 탄소강 후판 덤핑방지관세 확정 부과('25.11월) 시, 중소기업 수입물품이
가격약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자 및 해외공급자간 이해 조정

□ 우회덤핑방지제도 확대를 통한 ①국내산업 보호, ②덤핑방지제도 실효성 확보, 교역국에 대한 ③국내 산업 대외신인도 회복

- 국내 생산자 및 관련 협회 등은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강화 기대

* 언론은 우회덤핑방지제도 확대를 보도하며, 국내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
연합·경향 등('25.11.4.) : "제3국 및 보세구역 통한 우회덤핑 규제 강화"